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 전화 : 02-778-4017 / 전송 : 02-3147-1444 antipovertykr@gmail.com / 홈페이지 : antipoverty.kr

수신	언론사	참조	사회부
발신	빈곤사회연대	문의	정성철(010-7797-8913)
일자	2021년 7월 12일(월)	분량	총 2매
제목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인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지난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14일(수) 면담요청서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하고,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인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

| 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 오전 10시

| 참여링크 : <https://youtu.be/w-MjVUH6XFQ>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가)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조은